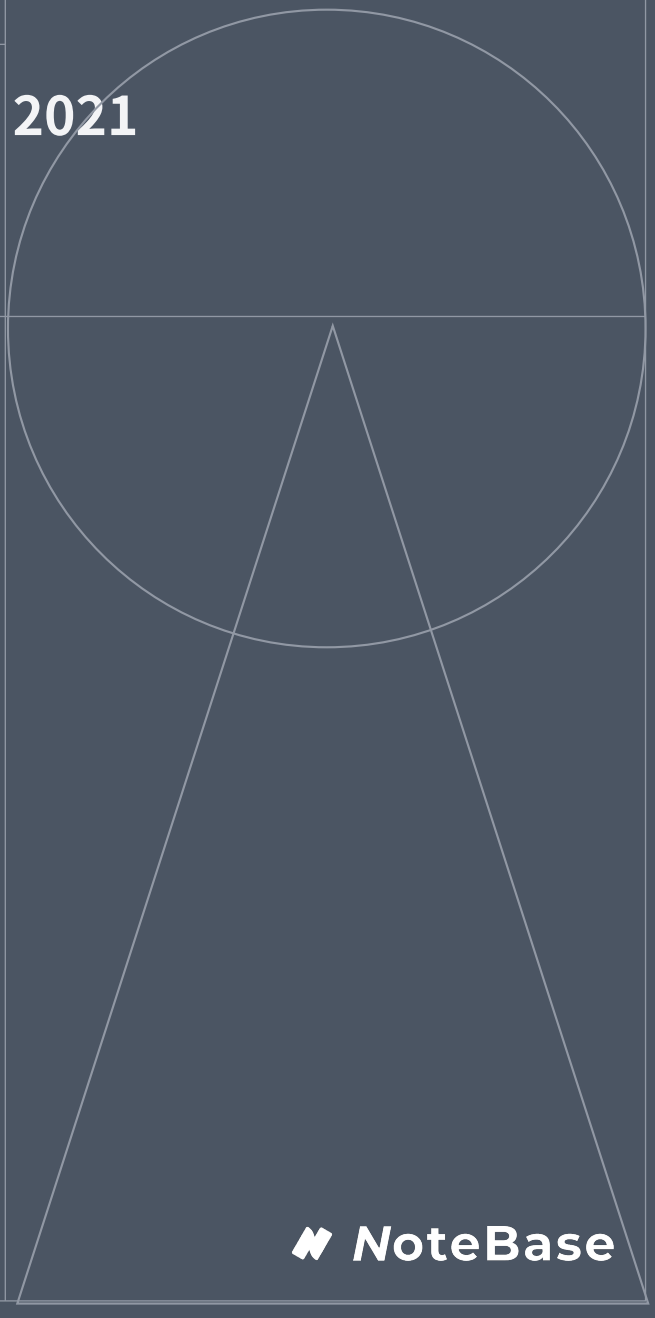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 · 2021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 · 2021

문 1. 다음 헌법상 기본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정당화한다.

②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다.

③ 다른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전제가 된다.

④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 수단적 권리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교육을 받을 권리·근로의 권리·환경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사회권**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교육 제도 마련, 고용 증진, 환경 보전 등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사회권은 국민이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제시된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제35조의 환경권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 여건을 마련하고 고용을 증진하며 환경을 보전하려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므로, 사회권은 이러한 개입을 정당화한다.

② X: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라는 설명은 **자유권의 특징**이다. 제시된 사회권은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교육·근로·환경 등의 생활 조건을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통해 보장받는 권리이다.

③ X: 다른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다.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누구나 다른 기본권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권의 특징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④ X: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청원권이나 재판 청구권처럼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청구하는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사회권은 교육·근로·환경 등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받는 권리이다.

NoteBase

문 2. 다음은 갑국 의회의 의원 선거 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의원 200명과 비례 대표 의원 100명)
○ ㉠ 지역구 의원: 선거구는 200개 지역구로 구성됨. 각 지역구에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후보자를 해당 선거구의 당선자로 결정함
○ ㉡ 비례 대표 의원: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함. 각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할당된 정당별 비례 대표 의원 수를 각 정당은 미리 작성한 비례 대표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기반을 두어 확정함

① ㉠ 선거는 절대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 선출 방식은 한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 간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③ ㉠ 선출 방식은 ㉡ 선출 방식보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차이를 작게 발생시킨다.
④ ㉡ 선출 방식은 ㉠ 선출 방식보다 의회 의석 배분에 국민의 의사를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므로, 각 지역구의 1위 후보만 당선되는 ㉠보다 지지받은 정도를 의석에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은 각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 1명을 선출하는 **상대다수 대표제**이다. 다른 후보보다 표를 많이 얻으면 과반수를 얻지 못해도 당선된다. 절대다수 대표제는 당선에 과반수 득표를 요구한다.

② X: ㉡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각 정당의 명부 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정한다. 따라서 후보자마다 얻은 표가 다른데도 똑같이 의석 1석을 얻는 방식과 구별된다. 선지의 문제는 한 선거구에서 후보자별 득표순으로 여러 명을 뽑을 때 당선자들의 득표수가 서로 달라 나타날 수 있다.

③ X: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간 차이를 줄이는 데 유리한 것은 **㉡보다** ㉡이다. ㉠에서는 각 지역구의 1위 후보만 의석을 얻으므로 낙선 후보에게 간 표는 의석 배분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당이 전체적으로 얻은 표의 비율과 차지한 의석의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므로 이러한 차이를 줄일 수 있다.

④ O: ㉡은 정당별 지지 정도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므로, ㉠에서 낙선 후보에게 투표하여 의석 배분에 반영되지 못할 수 있는 유권자의 의사도 의석에 반영하기 쉽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의회 구성에 반영**하는 데 유리하다.

NoteBase

문 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공공 서비스나 행정 활동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① (가)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인다.
② (나)가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정지된다.
③ (가)와 (나) 모두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다.
④ (가)와 (나)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강화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나)는 사무 처리의 위법성 등을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로, 감사가 청구되었다고 단체장의 권한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단체장의 권한 정지는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발생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가)는 주민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이다. (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이다.

① O: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에 주민의 의견과 감시가 반영되도록 한다. 예산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과정이 주민에게 드러나므로 투명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주민의 필요를 고려하므로 **특정 집단에 치우친 재원 배분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② X: 주민감사청구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무 처리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제도**이며, 그 자체로 단체장의 권한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단체장의 권한 정지와 관련된 것은 주민소환제도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주민소환도 청구만으로 곧바로 권한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③ O: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지역의 재정 운영에 참여하게 하고,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이 위법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사무 처리를 감시하게 한다. 두 제도 모두 **지역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대**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④ O: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결정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주민감사청구제도는 행정의 사무 처리에 주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주민 의사를 반영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므로 두 제도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강화한다.

NoteBase

문 4. 밑줄 친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반적인 대통령제는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간의 뚜렷한 권력 분립에 기초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함께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 권력 집중형 정치제도의 성격을 지닌다. 흔히 이를 한국형 대통령제라고도 부른다.

<보기>
ㄱ.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ㄴ.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ㄹ. 대통령은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이고, 국회가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행정부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수단이다. 두 제도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포함된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이 문제는 각 진술이 우리나라의 제도인지 여부보다, 그 제도가 의원내각제적 요소인지 대통령제적 요소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ㄱ. 의원내각제적 요소: 헌법 제52조에 따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엄격한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하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달리, **행정부가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ㄴ. 대통령제적 요소: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여 재직하는 의원내각제의 내각과 달리,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가 정책에 반대하거나 신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 다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의 탄핵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없다는 뜻은 아니다.

ㄷ. 의원내각제적 요소: 헌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는 국회가 **행정부 구성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수단이므로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다만 해임건의만으로 해당 인사가 곧바로 해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원내각제의 내각 불신임과 효과가 같지는 않다.

ㄹ. 대통령제적 요소: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대통령제의 권력 분립과 견제·균형을 보여 준다.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하는 보기는 ㄱ과 ㄷ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5. (가) ~ (다)에 들어갈 민주 선거의 원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2014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3대 1 기준이었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가 (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선거구 중 '인구수가 최대인 선거구'와 '인구수가 최소인 선거구'의 인구 차이가 2배를 넘지 않기를 권고했다.
◯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 시행되었던 1인 1표제는 정당에 대해서 투표하는 절차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가 얻은 득표율을 기반으로 정당에게 배분할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제도였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1인 1표제에서는 정당 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어 유권자가 비례 대표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권을 갖지 못하므로 (나) 원칙에 어긋나며, 또한 유권자가 지역구에서 무소속 후보자에 투표하는 경우 그 투표는 무소속 후보자의 선출에만 기여할 뿐 비례 대표 의원의 선출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1인 1표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게 각각 1표씩 행사하는 1인 2표제로 변경되었다.

① (가): 평등 선거, (나): 평등 선거, (다): 보통 선거
② (가): 보통 선거, (나): 직접 선거, (다): 평등 선거
③ (가): 평등 선거, (나): 직접 선거, (다): 평등 선거
④ (가): 보통 선거, (나): 평등 선거, (다): 직접 선거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선거구별 인구 차이와 무소속 후보자에게 한 투표의 효력 차이는 모두 **투표 가치의 평등**에 관한 문제이다. 정당 명부에 별도로 투표하지 못해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을 직접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직접 선거** 원칙과 관련된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가) 평등 선거: 평등 선거는 유권자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하고 **한 표의 가치도 동등하게** 보장하는 원칙이다. 같은 수의 의원을 뽑는 선거구 사이에 인구 차이가 지나치게 크면, 인구가 많은 선거구 유권자의 한 표가 의원 선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따라서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재산·성별·신분 등에 따른 선거권 제한을 배제하는 보통 선거와 구별된다.

(나) 직접 선거: 직접 선거는 유권자의 투표로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원칙이다. 제시문의 1인 1표제에서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한 투표가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도 이용되지만, 유권자는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선택을 별도로 할 수 없다**.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그 후보자의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지역구 투표를 정당 명부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 표시로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직접 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다) 평등 선거: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한 투표는 지역구 의원 선출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모두 기여하지만, 무소속 후보자에게 한 투표는 지역구 의원 선출에만 기여한다. 같은 한 표인데도 **비례대표 선출에 미치는 효력이 달라지므로** 투표 가치의 평등이 침해된다.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에게 선거권 자체를 주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보통 선거 위반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가)는 평등 선거, (나)는 직접 선거, (다)는 평등 선거이므로 이 연결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③이다.

NoteBase

문 6. 다음 헌법 조항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① 권력분립과 적법절차 원리에 의해 실현된다.

②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보장과 관련 있다.

③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 보장을 추구한다.

④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제도와 관련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권력분립과 적법절차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치주의**의 실현 수단이다. 제시된 조항은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복지 국가 원리**를 나타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제119조 제2항의 소득 분배 및 경제에 대한 규제·조정은 복지 국가 원리의 근거이다. 사회 국가 원리라고도 하며, 국가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① X: 권력분립과 적법절차는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권력분립은 국가권력을 나누어 상호 견제하게 하고, 적법절차는 국가권력의 행사에 적정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여 기본권을 보호한다. 복지 국가 원리는 사회 보장 제도와 소득 재분배 정책 등으로 구체화된다.

② O: 적정임금 보장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복지 국가 원리의 표현이다.

③ O: 법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인정하더라도 빈곤이나 심한 경제적 격차로 이를 실제 누리기 어려울 수 있다. 복지 국가 원리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여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 한다.

④ O: 공공 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사회 보험은 보험 방식으로 질병·노령·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두 제도 모두 **생활의 어려움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므로 복지 국가 원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NoteBase

문 7. 그림은 헌법 개정 절차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는 대통령 또는 헌법재판소의 발의로 이루어진다.

② (나)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다)는 국민 투표에 해당한다.

④ (라)는 (다)에서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즉시 하여야 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헌법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헌법재판소에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권한이 없다.

선지별 해설

① X: (가)는 헌법개정안의 제안 단계이다. 헌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로 고쳐야 한다.

② O: (나)는 공고된 헌법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하는 단계이다. 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찬성 비율의 기준은 출석 의원이 아니라 재적 의원이다.

③ O: (다)는 국회 의결 뒤에 이루어지는 국민 투표이다. 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투표 참여 요건과 찬성 요건의 기준이 되는 집단을 구별해야 한다.

④ O: (라)는 대통령의 공포 단계이다. 헌법 제130조 제3항에 따라 (다)의 국민 투표에서 필요한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이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확정은 국민 투표에서 이루어지며, 그 뒤 대통령의 공포가 이어진다.

NoteBase

문 8. 다음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중 하나이다)

갑이 행한 행위가 범죄의 성립 요건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먼저 (가)를 검토해야 한다. (가)를 충족할 경우 (나)를 따져본 후 (다)의 충족 여부까지 검토해야 형사상 범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① (가)는 갑의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② 갑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나)에서 범죄 불성립으로 판단될 수 있다.

③ (가), (나) 모두에서 갑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물을 수 있다.

④ 갑이 농아자(청각 및 언어장애인)이고 그 행위가 (가), (나)를 충족하는 경우 (다)는 조각되지 않고 형을 감경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가)·(나)가 아니라 **(다)인 책임**에서 판단한다. (가)는 행위가 법률에 정해진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지, (나)는 그 행위가 법질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범죄 성립 여부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순서로 검토한다. 따라서 (가)는 구성 요건 해당성, (나)는 위법성, (다)는 책임이다. 앞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O: 구성 요건은 법률이 정해 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이다. (가)에서는 갑의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 요건에 들어맞는지**를 판단하므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는 설명은 이에 부합한다.

② O: 피해자의 승낙은 요건을 갖추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 형법 제24조에 따라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관하여 유효하게 승낙한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법익을 침해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나)에서 위법성이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③ X: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지를 뜻하며, **책임인 (다)**에서 판단한다. (가)는 법률에 정해진 범죄 유형과 행위가 일치하는지, (나)는 그 행위가 법질서에 위배되는지를 따진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묻는다는 표현을 (다)에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형법 제11조는 농아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한다. 농아자는 듣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농아자라는 사정은 **책임 조각이 아니라 형의 감경 사유**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다)가 부정되어 범죄가 불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9. 다음은 형사 절차를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은?

(가) 수사 → (나) 기소 → (다) 공판 → (라) 판결

① (가)에서 구속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② (나)시기부터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기 시작한다.
③ (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④ (라)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피고인은 반드시 구금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공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X: (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영장주의에서 **청구는 검사, 발부는 법관**의 권한이다.

② X: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기소 이전인 수사 단계부터**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피고인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나) 기소 시점에 처음 생기는 권리가 아니다.

③ O: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다) 공판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이 무죄를 증명하지 못했더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④ X: (라)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반드시 구금되는 것은 아니다**. 벌금형은 금전을 납부하는 형벌이며,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할 수도 있다.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이므로 유죄 판결의 확정과 실제 수용은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문 10. 다음은 판결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이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이 사건의 경우, 갑이 을에게 백만 원을 빌려주면서 맺은 계약은 무효이다.

① 갑은 을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 주었다.
② 갑과 을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였다.
③ 미성년자 갑이 부모의 허락 없이 친구인 을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④ 갑은 약속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을의 손목을 자르기로 하였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돈을 갚지 않으면 손목을 자르기로 하는 약정은 **신체를 훼손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이러한 내용까지 법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각 사례가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① X: 을의 속임수로 갑이 돈을 빌려 준 것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② X: 돈을 빌려 주고 돌려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민법 제598조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한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도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③ X: 미성년자가 돈을 빌려 주는 행위는 자기 재산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이므로 단순히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부모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며,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④ O: 약속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손목을 자르기로 한 내용은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는 약정이다. 이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당사자가 동의했더라도 이러한 신체 훼손 약정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NoteBase

문 11.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운동선수 A 소개>
◯ 소속: □□㉠ 회사의 프로농구팀
◯ 직업: ㉡ 농구 선수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2018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 수상: 2017년 올해의 ㉤ 최우수선수상

① ㉠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② ㉡은 A의 귀속지위, ㉣은 A의 성취지위이다.
③ ㉢은 이익사회이면서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④ ㉤은 ㉡으로서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고등학교는 교육이라는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이익사회**이며, 가족 등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적인 사회화를 넘어 전문적인 지식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범을 가르치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회사는 경제적 이익 추구가 주된 목적이며, 사회화 자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 구성원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업무 방식이나 조직의 규범을 배우므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는 학교처럼 사회화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해당한다.

② X: 귀속지위는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지위이고, 성취지위는 노력이나 능력 등을 통해 획득하는 지위이다. ㉡ 농구 선수는 훈련과 능력을 통해 얻은 직업상의 지위이며, ㉣ 2018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도 선발을 통해 얻은 지위이므로 **둘 다 성취지위**이다.

③ O: ㉢ 고등학교는 교육이라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므로 **이익사회**이다. 또한 가족 등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적인 사회화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범을 가르치므로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사회화의 단계에 따른 1차적·2차적 구분과 설립 목적에 따른 공식적·비공식적 구분은 기준이 다르므로, 고등학교는 2차적이면서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④ X: 역할은 특정 지위에 대해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이고, 역할행동은 개인이 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행동이다. ㉤ 2017년 올해의 최우수선수상은 농구 선수에게 기대되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A가 실제 경기에서 보여 준 뛰어난 수행에 대한 보상이다. 따라서 **역할이 아닌 역할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NoteBase

문 12. 문화이해의 태도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 (가)는 (나), (다)와 달리 국수주의나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다)는 (가), (나)와 달리 해당 사회의 맥락을 고려하여 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려 한다.

① (가)는 자문화의 객관적 이해에 기여한다.
② (나)는 자문화 정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③ (다)는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갈등을 초래한다.
④ (가)는 문화 사대주의, (나)는 자문화 중심주의, (다)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나)는 다른 사회의 문화를 더 우월하게 평가하는 **문화 사대주의**이다. 자기 문화를 낮게 평가하고 외래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자문화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자기 문화를 우월하다고 여기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따라서 국수주의나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다)는 문화 상대주의이며, 남은 (나)는 문화 사대주의이다.

① X: (가)의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를 당연하거나 우월한 것으로 여기므로 자문화의 객관적 이해를 어렵게 한다. 자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문화 상대주의**이다. 다른 문화도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면 자기 문화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② O: (나)의 문화 사대주의는 다른 사회의 문화를 우월하게 보고 자기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태도이다. 외래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기 문화의 가치를 경시하면 자문화 정체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③ X: (다)의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 간 우열을 가리기보다 각 문화를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려 한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갈등을 초래하는 태도라기보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태도이다.

④ X: (가)는 자기 문화를 우월하게 보는 **자문화 중심주의**이고, (나)는 다른 사회의 문화를 우월하게 보는 **문화 사대주의**이다. (다)를 문화 상대주의로 연결한 부분은 맞지만, (가)와 (나)의 연결을 서로 바꾸어야 한다.

NoteBase

문 13. 표는 A국과 B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국과 B국의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한다)

구분	A 국	B 국
중층 대비 상층의 비	$\frac{1}{3}$	$\frac{2}{3}$
중층 대비 하층의 비	$\frac{1}{3}$	$\frac{5}{3}$

① 전체에서 상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A국보다 B국이 높다.

② 전체에서 하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A국과 B국이 동일하다.

③ 상층 대비 하층의 비는 A국보다 B국이 높다.

④ A국은 피라미드형, B국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상층 대비 하층의 비는 하층을 상층으로 나눈 값이다. A국은 1, B국은 $\frac{5}{2} = 2.5$이므로 **B국이 더 높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의 두 비는 모두 '중층'을 기준으로 한다. 중층을 3으로 놓으면 상층 : 중층 : 하층은 A국이 1 : 3 : 1, B국이 2 : 3 : 5이다. 각 계층의 비율은 해당 계층의 값을 세 계층 값의 합으로 나누어 구한다.

① X: 전체에서 상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A국이 $\frac{1}{1+3+1} \times 100 = 20\%$, B국이 $\frac{2}{2+3+5} \times 100 = 20\%$이다. 중층 대비 상층의 비는 B국이 높지만, **전체에서 상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두 나라가 같다**.

② X: 전체에서 하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A국이 $\frac{1}{5} \times 100 = 20\%$, B국이 $\frac{5}{10} \times 100 = 50\%$이다. 두 나라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B국이 더 높다**.

③ O: 상층 대비 하층의 비는 **상층을 분모, 하층을 분자**로 계산한다. A국은 $\frac{1}{1} = 1$, B국은 $\frac{5}{2} = 2.5$이므로 A국보다 B국이 높다.

④ X: A국은 상층 20%, 중층 60%, 하층 20%로 중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다이아몬드형**이다. B국은 상층 20%, 중층 30%, 하층 50%로 하층에서 상층으로 갈수록 비율이 작아지는 **피라미드형**이다. 선지는 두 나라의 계층 구조를 서로 바꾸어 제시했다.

NoteBase

문 14. 다음은 연구 단계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무작위로 선정한 전국 초등학생 2,000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초등학생 자녀의 시험 불안감에 대해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초등학생 자녀의 시험 불안감은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라) 수집한 자료를 통계 분석 한 결과,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초등학생 자녀의 시험 불안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독립변수, '초등학생 자녀의 시험 불안감'은 종속변수이다.

②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에 정서적 교감이 중요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③ (가)와 달리 (나), (라)에서는 연구자의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④ 연구는 (다)－(나)－(가)－(라)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설은 기각되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시험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이다. 영향을 주는 요인인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독립변수**이고, 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는 **자녀의 시험 불안감은 종속변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독립변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설정한 변수이고, 종속변수는 그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결과로 설정한 변수이다. (다)의 가설은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가 높아지면 자녀의 시험 불안감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양육태도가 원인, 시험 불안감이 결과**에 해당한다.

② X: (가)에서 사용한 질문지법은 미리 마련한 질문에 연구대상자가 응답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다수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자료를 얻기에 적합하며,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정서적 교감이 핵심 요건은 아니다. **정서적 교감과 신뢰 관계**는 심층적인 응답을 이끌어 내는 면접법이나 연구대상의 생활에 참여하는 참여 관찰법에서 특히 중요하다.

③ X: (나)는 연구 주제 선정 단계로, 무엇을 연구할지 정하는 데 연구자의 관심과 가치가 개입할 수 있다. 반면 (가)의 자료 수집과 (라)의 자료 분석에서는 연구자의 선호에 따라 응답이나 결과를 왜곡하지 않도록 **가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나)와 (가)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④ X: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나) → (다) → (가) → (라)**이다. 먼저 연구 주제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증할 가설을 세운 다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라)에서는 자율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시험 불안감이 낮아지는 부(-)적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다)의 예상과 일치하므로 가설은 기각된 것이 아니라 **수용되었다**. 이는 해당 자료가 가설을 뒷받침한다는 뜻이며, 모든 경우에 성립함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5. 표는 갑국의 인구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	t 년	t + 50년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28	20
노년 부양비(%)	20	60

※ 1) 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2) 노년 부양비(%) $= \frac{\text{노인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3)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인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4)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임.

①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다.

② t + 50년의 노령화 지수는 100 이상이다.

③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보다 t + 50년이 낮다.

④ t년은 고령화 사회에, t + 50년은 초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유소년 부양비는 **전체 인구가 아니라 15~64세 부양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t년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28%, 부양 인구 비율은 60%이므로 유소년 부양비는 50이 아니라 **약 46.7**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각 시점의 전체 인구를 각각 100명으로 환산한다. t년에는 유소년 인구가 28명이므로 부양 인구와 노인 인구의 합은 72명이다. 노년 부양비가 20이므로 노인 인구는 부양 인구의 0.2배이고, 부양 인구는 $\frac{72}{1.2} = 60$명, 노인 인구는 12명이다. t + 50년에는 유소년 인구가 20명이고 노년 부양비가 60이므로, 부양 인구는 $\frac{80}{1.6} = 50$명, 노인 인구는 30명이다.

① X: 유소년 부양비는 유소년 인구를 부양 인구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이다. t년에는 $\frac{28}{60} \times 100 \approx 46.7$이므로, 50을 **약 46.7**로 고쳐야 한다. 이는 부양 인구 100명당 유소년 인구가 약 46.7명이라는 뜻이다.

② O: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를 나타낸다. t + 50년에는 $\frac{30}{20} \times 100 = 150$이다.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으므로** 노령화 지수는 100 이상이다.

③ O: 부양 인구는 자료에서 정한 15~64세 인구이다.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 60%, t + 50년 50%이므로 **10%p 낮아진다**. 이는 인구 비율의 비교이며, 실제 부양 인구 수의 증감을 뜻하지는 않는다.

④ O: 사회의 고령화 정도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구분한다. t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12%로 7% 이상 14% 미만이므로 고령화 사회에 해당한다. t + 50년에는 30%로 20% 이상이므로 초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6. 표는 재화 A ~ D를 소비와 관련된 특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A	C
비경합성	B	D

① A는 공공재이다.

② B는 A와 달리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③ C의 사례로 고갈되기 쉬운 공해상의 어족이 있다.

④ D는 재화의 속성상 시장에서 사회적 최적 수준만큼 충분히 거래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C는 표에서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공유 자원이다. 공해상의 어족은 다른 사람의 어획을 막기 어렵지만, 누군가 잡으면 남은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줄어들므로 이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이고, 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줄이는 성질이다. 표의 열은 배제성 여부를, 행은 경합성 여부를 나타낸다.

① X: A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가진 **사적 재화**이다.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있고,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 공공재는 A가 아니라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D이다.

② X: B는 비경합적이지만 A와 마찬가지로 **배제성이 있다**.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있다. 무임승차자 문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배제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B가 A와 달리 그 문제를 겪는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③ O: C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공유 자원**이다. 고갈되기 쉬운 공해상의 어족은 다른 사람의 접근과 어획을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배제적이다. 동시에 한 사람이 물고기를 잡으면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경합적이다.

④ X: D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공공재이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민간 공급자는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 시장에서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공급되거나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NoteBase

문 17.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갑은 X재와 Y재만을 합리적으로 소비한다. 표는 각 재화 1개 추가 소비에 따른 편익 증가분을 화폐 단위로 나타낸다. 각 재화의 가격은 각각 5달러이고 갑의 현재 용돈은 25달러이다. 단, 갑은 용돈을 모두 사용한다.

(단위: 달러)

구분	1개째	2개째	3개째	4개째	5개째
X재	10	9	7	4	0
Y재	12	10	6	0	−8

① X재 2개, Y재 3개 소비 시 총편익이 가장 크다.

② X재 소비 증가에 따른 총편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③ Y재만을 소비하는 경우 총편익은 음(-)의 값을 가진다.

④ 용돈이 5달러 증가하면 현재보다 Y재 1개를 추가로 소비하게 될 것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현재 총편익을 가장 크게 하는 소비 조합은 X재 3개와 Y재 2개이다. 용돈이 5달러 늘면 X재 4개째의 편익 증가분은 4달러, Y재 3개째는 6달러이므로 **Y재를 1개 더 소비**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의 수치는 재화를 1개 더 소비할 때 늘어나는 편익인 '한계편익'이다. 총편익은 소비한 각 재화의 한계편익을 모두 더한 값이다. 두 재화의 가격이 모두 5달러이므로, 용돈을 모두 쓰면서 총편익을 가장 크게 하려면 한계편익이 큰 것부터 선택한다.

① X: 현재 용돈 25달러로는 두 재화를 합쳐 5개 소비한다. X재 2개와 Y재 3개의 총편익은 (10 + 9) + (12 + 10 + 6) = 47달러이다. 반면 X재 3개와 Y재 2개의 총편익은 (10 + 9 + 7) + (12 + 10) = 48달러이다. 이 조합은 한계편익이 큰 다섯 개를 선택한 것이므로, 총편익은 **X재 3개와 Y재 2개**를 소비할 때 가장 크다.

② X: X재의 소비량이 1개에서 5개로 늘 때 총편익은 10달러, 19달러, 26달러, 30달러, 30달러이다. **감소하는 것은 총편익이 아니라 한계편익**이다. 한계편익이 양수인 4개째까지 총편익은 증가하고, 한계편익이 0인 5개째에서는 더 늘지 않는다.

③ X: 현재 용돈을 모두 Y재에 쓰면 5개를 소비한다. 이때 총편익은 12 + 10 + 6 + 0 − 8 = 20달러로 **양수**이다. 5개째의 한계편익이 −8달러라는 것은 총편익이 4개 소비 때의 28달러에서 8달러 줄어든다는 뜻이지, 총편익 자체가 음수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④ O: 용돈이 30달러가 되면 두 재화를 합쳐 6개 소비할 수 있다. 현재의 X재 3개와 Y재 2개에 추가할 수 있는 X재 4개째의 한계편익은 4달러, Y재 3개째는 6달러이다. 가격이 같으므로 **한계편익이 더 큰 Y재 3개째**를 선택한다. 따라서 X재는 3개로 유지하고 Y재를 3개로 늘리며, 총편익은 48 + 6 = 54달러가 된다.

NoteBase

문 18.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내용 이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사치품에 비해 생활 필수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더 크다.

② 대체재가 없는 상품보다 대체재가 있는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더 크다.

③ 상품의 가격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④ 상품의 가격 변동에 대해 소비자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①의 '생활 필수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더 크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생활 필수품은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줄이기 어려우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사치품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작다**.

선지별 해설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며, 보통 절댓값으로 비교한다. 같은 비율의 가격 변화에 수요량의 변화율이 클수록 탄력도가 크다. 각 요인은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에서 비교한다.

① X: 생활 필수품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여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크게 줄이기 어렵다. 사치품은 구입을 미루거나 포기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생활 필수품의 수요가 사치품의 수요보다 가격에 덜 탄력적이다**. 선지의 '더 크다'는 '더 작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대체재가 있으면 상품 가격이 올랐을 때 **다른 상품으로 소비를 바꾸기 쉽다**. 따라서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해당 상품의 수요량이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크다.

③ O: 상품 가격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같은 비율로 가격이 올라도 **가계가 느끼는 추가 부담이 크다**. 소비자는 구매량을 줄이거나 다른 소비 방법을 찾으려 하므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④ O: 가격 변동 직후에는 기존 소비 습관이나 이용 방식을 바로 바꾸기 어렵다. 적응할 시간이 길어지면 **대체재를 찾거나 소비 방식을 바꿀 여지가 커진다**. 이에 따라 같은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을 더 크게 조정할 수 있어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NoteBase

문 19. 표에 나타난 t년 대비 t+1년 환율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분	t년	t + 1년
원/달러	1,075	1,138

①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상승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②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우리나라에서 달러화 예금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③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은 감소할 것이다.

④ 원화 대비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75원에서 1,138원으로 상승했으므로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달러화 가치는 상승**했다. 수출품의 원화 가격이 일정하다면 미국 소비자가 지불하는 달러화 가격이 낮아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원/달러 환율은 1달러와 교환되는 원화 금액이다. 표에서 t년의 1,075원이 t+1년에 1,138원으로 늘었으므로 같은 1달러를 사는 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 이는 원화 가치 하락과 달러화 가치 상승을 뜻한다. 이하에서는 환율 이외의 조건은 일정하다고 본다.

① X: 원화 가치는 상승한 것이 아니라 **하락했다**. 달러화로 표시된 수입품 가격이 같아도 이를 사는 데 필요한 원화 금액은 늘어난다. 따라서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 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을 원화 가치 상승으로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② X: 원/달러 환율은 하락한 것이 아니라 **상승했다**. 달러화 예금의 잔액이 같다면 이를 원화로 환산한 자산가치는 커진다. 예금 1달러의 원화 환산액이 1,075원에서 1,138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결과는 맞지만 환율 변동 방향을 잘못 설명했다.

③ X: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미국 여행에 필요한 달러화를 마련하는 데 더 많은 원화가 든다. 현지에서 지출하는 달러화 금액이 같다면 우리나라 사람의 **원화 기준 여행 경비 부담은 증가한다**. 따라서 경비 부담이 감소한다는 설명을 증가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달러화 가치가 원화에 비해 상승했으므로 같은 달러화로 더 많은 원화를 살 수 있다. 우리나라 수출품의 원화 가격이 일정하다면 미국 소비자가 지불하는 **달러화 표시 가격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NoteBase

문 20. 다음은 갑, 을이 노동만을 투입하여 하루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각 재화의 최대량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구분	갑	을
물고기	10마리	5마리
나무열매	3개	4개

① 갑은 두 재화의 생산 모두에서 절대 우위가 있다.

② 나무열매 1개 생산에 따른 기회 비용은 을이 갑보다 크다.

③ 갑은 나무열매에, 을은 물고기에 특화하여 재화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특화 후 나무열매 1개당 물고기 3마리로 교환하면 두 사람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나무열매 1개의 기회 비용은 갑이 물고기 $\frac{10}{3}$마리, 을이 $\frac{5}{4}$마리이다. 교환 대가인 물고기 3마리는 **두 기회 비용 사이**에 있으므로, 갑은 직접 생산할 때보다 적은 물고기로 나무열매를 얻고 을은 생산하면서 포기한 물고기보다 많은 물고기를 받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기회 비용은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양이다. 표의 하루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재화 1단위의 기회 비용은 다른 재화의 최대 생산량을 그 재화의 최대 생산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① X: 절대 우위는 같은 노동을 투입하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하루 동안 물고기는 갑이 10마리, 을이 5마리를 생산하고, 나무열매는 갑이 3개, 을이 4개를 생산한다. 따라서 **갑은 물고기에, 을은 나무열매에 절대 우위**가 있다.

② X: 나무열매 1개를 생산할 때 갑은 물고기 $\frac{10}{3}$마리를, 을은 물고기 $\frac{5}{4}$마리를 포기한다. $\frac{5}{4} < \frac{10}{3}$이므로 나무열매 1개의 기회 비용은 **을이 갑보다 작다**.

③ X: 비교 우위는 다른 사람보다 기회 비용이 낮은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다. 물고기 1마리의 기회 비용은 갑이 나무열매 $\frac{3}{10}$개, 을이 $\frac{4}{5}$개이므로 갑이 물고기에 비교 우위가 있다. 나무열매 1개의 기회 비용은 을이 더 낮으므로, **갑은 물고기에, 을은 나무열매에 특화**하여 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O: 특화 후 갑은 물고기를 내주고 나무열매를 받으며, 을은 나무열매를 내주고 물고기를 받는다. 나무열매 1개당 물고기 3마리로 교환하면 갑은 직접 나무열매를 생산할 때 포기하는 물고기 $\frac{10}{3}$마리보다 적은 3마리만 내주면 된다. 을은 나무열매 1개를 생산하며 포기한 물고기 $\frac{5}{4}$마리보다 많은 3마리를 받는다. 이처럼 교환 비율이 **두 사람의 기회 비용 사이**에 있어 두 사람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NoteBase